

보도자료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 발 신 :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일동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인천평화복지연대 조현재 사무국장 010-2322-6692
- 일 자 : 2015.12.02(수)
- 제 목 : 여야 학교 앞 호텔법, 「관광진흥법」 본회의 처리합의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총2매)

여야 '학교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무능보다 나쁜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학교 앞 호텔법',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을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여야의 야합은 학습환경 파괴는 물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처참히 짓밟은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도부의 잘못된 야합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학교 앞 호텔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무능'보다 '정치적 야합'이 더 나쁜 선택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앞에 아무런 통제 없이 100실 이상의 대형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전국에 수많은 학교가 온갖 소음과 먼지로 뒤 덮여 공사판이 될 것이며 학습권이 파괴될 것이다. 또한 학교 앞 고층 호텔로 인해 학교생활이 그대로 노출돼 '우리 안 원숭이'로 전락해 인권침해까지 우려된다.

학교 앞 호텔법의 명분인 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학교 앞 호텔법을 통과시킬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다. 여야의 야합은 당리당락에 따라 어떠한 약속이라도 어길 수 있고, 어떠한 가치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학교 앞 호텔법을 비판했었다. 그랬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용 성과를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맞바꾼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다. 여야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학습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학교 앞 호텔반대시민모임은 여야의 정치적 야합을 강력히 비판하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지로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희망한다. <끝>

2015년 12월 2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